

# 종합토론

**양승찬(사회자):** 두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발제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조금 전 발제를 마쳐주신 이용성 교수님께서 먼저 종합토론을 시작해 주시고, 이어서 김민정 교수님께서 전통언론과 관련해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성(제2주제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완해주신 부분도 있고, 이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심의기간이 정해져 있어 심의기간 이외의 기간에 보도된 선거기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선거보도 심의기간 이전과 이후에 생겨나는 선거보도 양상을 참작해서 상설화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기구의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 언론관계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정의 등과 관련한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보도 심의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언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언론관계법에서 언론 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위조작정보의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아니라 ‘정보’라는 점이 강조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접하는 인터넷 상 여론에서 ‘가짜뉴스’ 관련 규제 논의는 기존 미디어가 제공하는 의도성이 다분한 오보에 대한 것이지 인터넷에 범람하는 ‘정보’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일부 그룹에서 소비된다는 인식 탓에 논의에서 조차 배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가짜뉴스’ 관련 법령 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언급되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되, 피해구제 차원을 이야기한다면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승찬:**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교수님께서 토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정(제1주제 발제자):**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로렌스 레식이 언급한 규제의 네 가지 기제가 생각났습니다. 네 가지 규제 중에 하나는 법인데, 앞서 언급된 것처럼 법을 통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기제로는 시장이 있습니다. ‘악화’가 너무 쉽게 생산되고 있고 제대로 걸러내기 힘들다는 김대영 토론자의 말씀을 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키텍처(architecture)라고 불리는 코드(code)가 있습니다. 박아란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회적 규범 부분입니다. 이번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는 규범의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회의적으로 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규범에 관해서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듣게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해결방안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은 규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제언들은 우리의 지향점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자들도 와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규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한 확인을 해나가야 언론의 문제든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한국 언론이 문제가 많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법에만 기대거나, 플랫폼 사업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언론은 사회적 차원에서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혐오발언’ 입니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언론이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자꾸 기사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혐오 없는 선거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안’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크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 중 하나가 ‘혐오’ 입니다. 정치인,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인 인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혐오’ 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적 주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언론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찬:** 발제자 두 분께서 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미디어스 기자):** 최승민 팀장님을 비롯해 선거보도 심의기구 상설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최승민 팀장님의 경우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언론 이용자를 근거로 드셨습니다. 자치단체와 언론이 결탁한 선거기사가 언론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드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거기사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선거보도 심의기구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다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거기사 심의기간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김경수 지사 관련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적시 명예훼손 처벌조항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충분함에도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론중재위원회도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문제적 보도를 규율하고 있는데 선거보도 심의기구까지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언론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승민(제2주제 토론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불과 몇 십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역 미디어는 지역의 유권자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의식조사를 하는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65% 가까운 유권자가 언론매체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화로 운영되어 선거시기가 아니더라도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상설화가 되어있지 않아 상시적인 선거보도 심의와 피해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은 법리가 명확하지만 선거시기의 선거기사 공정성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에서 언론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심의기구와 관련한 중복심의 또는 중복규제 문제와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상설화된 세 개의 심의기구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양승찬:** 최승민 팀장님께서 답변과 함께 전문성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말씀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문을 짧게 받겠습니다.

**이수중(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심의기구 통합문제는 각 심의기구의 심의기준 불일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선거기사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으로 살펴보면, 심의기구 내에서의 심의기준 적용의 불일치성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심의기구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심리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기구는 선거 때마다 새롭게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심의위원들은 심의기구 운영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산해 심의 노하우를 쌓고 적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같이 상설화된 심의기구의 심의위원들은 최소한 3년이라는 임기 내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고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

하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승찬:** 새로운 지점을 강조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시고 계십니다. 토론회 개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선(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상설화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하나 개진할까 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기간 외에 발생한 선거보도 관련 심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후 30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30일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선거보도 심의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기간 외에 발생하는 선거기사 관련 문제제기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관련 심의기구를 상설화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복잡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승찬:** 이슈와 관련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이 선거보도와 관련해 받아온 지적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도 관행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정 교수님께서 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저널리즘과 관련한 본질적인 규범이 있고, 그 규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언론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싣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정치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지만, 복잡한 시장과 혼탁한 정보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허위조작정보 관련 논의에서는 혐오 발언을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 보도가 필요하다, 뉴스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데 기술적 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편향성에 함몰되지 말고 다양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연결해서 선거보도 심의가 보다 일관성 있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께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 귀 기울이시고 선거보도와 선거보도 심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어 위원장님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석형(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내년 총선은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제도 변경과 관련한 입법이 완성되면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선거는 전 인생을 걸고 치르는 전쟁 같은 것이어서 말씀하신 오정보(mis-information)든,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든, 악성정보(mal-information)든 간에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팩트체크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사후적으로는 각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원회의 일원화·통일화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준사법기관이고 독립성과 신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도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0년 총선 관련 보도와 심의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전달과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플로어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된 힘, 공정한 힘을 발휘하여 정치가 바뀌고 선거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